



SHIN & KIM NEWSLETTER

형사사법체계 개편 뉴스레터

- 수사·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전망

2026.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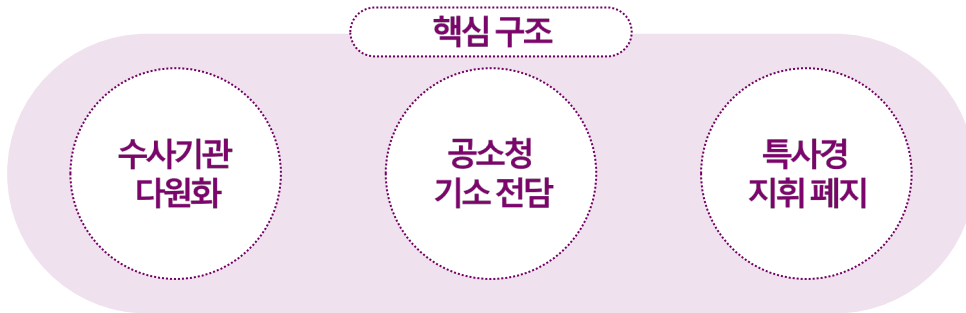
2026. 08.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수사·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전망

2026. 10. 2. 시행 -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경과 후 별도 시행



한눈에 보는 변화

01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

검사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 폐지

02



공소청은 기소·불기소, 영장 심사, 공소유지에 집중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는 "요구" 방식

03



특사경은 검사지휘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

다만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건송치는 유지

본 뉴스레터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 변화와 기업 실무상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절차별로 종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종전	개정 후
절차		
01 고소·고발/인지	✓ 고소·고발: 검찰·경찰 둘 다 가능 ✓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	✓ 고소·고발: 수사기관에 접수 ✓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
02 수사개시입건	✓ 검사 직접 수사 + 경찰 수사 병존 ✓ 특사경: 검사이 지휘 하 수사 진행	✓ 수사기관(경찰 중수청·특사경 등) ✓ 공소청: 직접 수사 불가 ✓ 특사경: 검사이 지도·조언 가능
03 강제수사조사	✓ 검사 직접 영장 청구 보완 수사 가능 ✓ 수사기관 별 기록화 수준 차이	✓ 수사기관 영장 신청 → 검사: <u>청구 또는 기각</u> ✓ 영상 녹화 진술 녹음: 추후 시행
04 송치/불송치	✓ 경찰: 혐의 인정 → 송치 혐의 불인정 → 불송치 ✓ 특사경: 전건 송치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기록 열람 제도 강화 ✓ 특사경: 전건 송치 유지
05 보완/재수사	✓ 검사 ① 직접 보완 수사 또는 ②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 검사 직접 보완 수사 불가 ✓ <u>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u> ‘요구’ ✓ 요구 후 이행 여부 관리
06 기소 판단/공판	✓ 검사가 수사,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영역 존재	✓ 검사가 기록, 법리 검토 후 <u>기소·불기소 판단</u> ✓ 공소유지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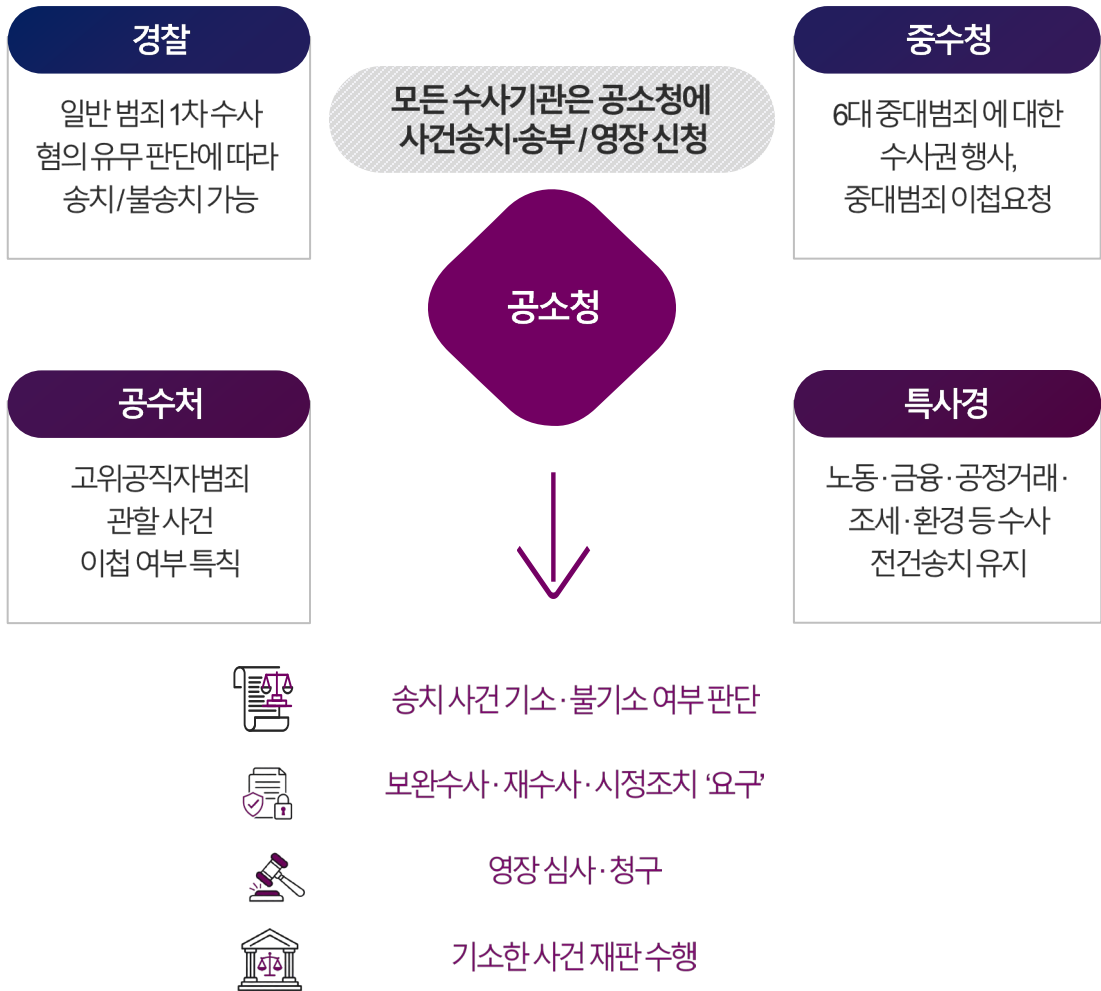


개정 후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형성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판단을 별도로 설득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한눈에 보는 새 형사사법체계

수사는 다원화되고, 기소는 공소청으로 집중됩니다

경찰·중수청·공수처·특사경과 공소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기본 구조



수사경합

중수청 이첩요청,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공소청의 위치

엄격한 기소 여부 판단 및 사법 통제 담당



수사기관 간 관할이 겹치더라도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영장·기소·보완재수사요구로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03 |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변화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뀝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절차별로 비교합니다.

BEFORE	AFTER 2026. 10. 2. 이후
검사→특사경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	특사경↔공소청 검사 지도·조언 중심의 상호 협력

절차별 쟁점	종전	개정 후
수사개시 / 입건범위 판단	관할 범죄 혐의 인식 후 검사지휘·감독을 전제로 수사방향 설정	특사경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개시 진행
검사의 수사개시 관여	수사개시·진행 과정에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통제 가능	수사지휘권 폐지, 필요시 지도·조언 등 협력
특별사법경찰의 판단 및 송치 범위	혐의 유무 관계 없이 검사에게 전건 송치	- 특사경: 불송치 결정 불가 전건 송치 유지 - 공소청: 검토 후 기소·불기소 판단
검사의 사후 통제	수사지휘·보완수사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 결과 직접 교정	- 검사: 직접 보완수사 불가 보완수사 요구 시 정조치 요구 통해 기록 보완 - 송치 후 기소 판단으로 사후 통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수사개시 초기 대응”과
“전건송치 후 공소청 기소판단 대응”을 별도 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 기관별 권한 비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는가

기관별 권한과 사건 종결 방식이 달라졌고, 공수처는 별도 관할을 유지합니다.

쟁점	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공소청
수사개시	○ 일반 범죄	○ 중대범죄등	○ 고위공직자범죄	○ 관할 범죄	X
피의자조사 증거수집	○	○	○	○	X
사건 종결	송치/ 불송치	중수청법상 사건처리	공수처법상 사건처리	전건송치 (불송치 없음)	기소/ 불기소
영장	검사에 신청	검사에 신청	검사에 신청	검사에 신청	신청시 판단 직접 청구 X
추가수사	직접 수사	직접 수사	직접 수사	직접 수사	직접 보완 불가 보완수사요구로 해결
기관간경합	조정 대상	중대범죄 이첩요청 (경찰은 요청에 응할 의무 O)	공수처가 이첩 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	사안별 판단	수사경합 당사자 아님



기업 사건에서 달라지는 핵심

- ①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는지
- ②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기록을 완성할지
- ③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어떻게 다룰지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 포인트가 됩니다.

05 | 검사 역할의 재설계

검사의 “공소·사법통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영장·보완수사요구·사실관계 확인 등 기소 판단을 위한 권한은 남습니다.

중전	2026. 10. 2. 이후
직접수사, 송치사건 직접 보완 가능	직접수사, 송치사건 직접 보완 폐지
특사경 수사지휘 가능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기소·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직접 실제 진실을 밝히는 수사 전문가	송치사건의 혐의 유무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의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사법통제 역할 수행

공소청 검사에게 남는 주요 통제수단

01	02	03	04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실관계 확인
송치 사건 등 원칙 1개월 내 이행	불송치 사건 원칙 3개월 내 이행	법령위반·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견 청취·자료 제출/ 취득 진술·자료는 증거 사용 제한



왜 공소청 변론이 여전히 중요한가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만 영장청구, 기소·불기소, 보완·재수사요구의 최종 관문입니다. 송치기록의 법리·증거 평가를 전제로 한 별도 변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06 | 공소청의 수사 통제수단

“무엇을 언제 요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수사 대신 요구관리 절차가 법률에 구체화되면서 기한과 사건 진행 상태 추적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제도	대상	검사촉시점	수사기관이행	특징
보완수사 요구	송치사건 등	요구 자체 기한 제한 없음	원칙 1개월 필요시 1개월 연장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재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 후 3개월 추가요구는 통보 후 1개월	원칙 3개월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시정조치 요구	수사중 위법 인권침해 등	인자 신고시	지체 없이 이행	특사경에도 준용
영장 심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사경 영장 신청시	공소청 심사 후 법원 청구	구속영장: 피의자 면담 가능

✓ 실무 포인트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추가로 만들 것인지”가 변론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시행일 유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제197조의4)는 공포 후 6개월,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제220조의2) 및 피의자신문 녹음(제244조의6)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됩니다.

07 | 기업 형사사건에서 체감할 변화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나눠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프레임 구성과 혐의 판단 단계의 법리증거 검토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01 수사기관 확정 단계

경찰/중수청/특사경 중
누가 주도하는지 확인

사건 관할 · 수사경합 판단

02 강제수사 대응 단계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2027.8.5.부터 시행

영장 범위 · 참여권 · 절차 위반 점검

03 수사기록 완성 단계

공소청은 직접 보완수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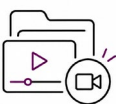
수사기관 단계에서 증거 · 법리 소명

04 공소청 기소 판단 단계

영장 · 기소 · 불기소 · 보완수사요구

별도의 종합 의견서와 면담 전략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압수·수색 영상기록
열람·복사



피의자·변호인 요청
시 진술 녹음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등사



고소인 등의 검사
면담 및 의견진술

08 |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 Client Q&A

기업 법무팀이 실제로 궁금해할 질문 10개를 선별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Q&A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10월 2일 전후로 진행 중인 우리 회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경찰 또는 중수청으로 이송,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원래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2026. 12. 30.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의 사건이 직접 보완
대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 고소·고발은 앞으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공소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 적절한 접수기관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는 무엇이고, 기업 사건은 모두 중수청이 맡나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법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담당하며, 모든 기업 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받으며, 그 중 금융·공정거래·
노동·환경·조세·식약 등 사건은 특사경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08 |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 Client Q&A

기업 법무팀이 실제로 궁금해할 질문 10개를 선별했습니다.

Q 04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면 중복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수청 이첩제도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전까지 복수 기관의 자료요구·출석요구에 대비해 제출자료와 진술 이력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Q 05 사건이 이첩되면 회사는 처음부터 다시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면 관심 범죄와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첩 시점에는 기존 진술·제출자료·압수물 목록을 재점검하고 새 기관의 관점에 맞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06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A 영장 범위, 참여권, 별건자료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더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및 영상기록 열람·복사 제도는 별도 시행일이 있으므로, 시행 전후 대응 매뉴얼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07 회사 임직원이 조사받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수사기관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기록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진술녹음 제도 등 절차적 통제 장치를 활용하되, 시행일과 적용범위를 확인해 조사 전 대응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08 |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질문

✓ Client Q&A

기업 법무팀이 실제로 궁금해할 질문 10개를 선별했습니다.

08 특별사법경찰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상호 협력·지도·조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특사경은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고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건송치하므로, 초기 수사대응과 공소청 단계 대응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09 공소청에서도 별도로 변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특사경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설명하고, 송치 후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의 필요성 등을 별도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피해 회사는 불송치나 지연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 후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이 인정됩니다.
검사 면담과 의견제출은 증거사용 제한과 별개로 재수사요구·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단계의 사실관계 형성”과 “공소청 단계의 기소 판단 설득”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9 | 기업의 대응 포인트

사건 초기부터 “두 단계의 변론”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만들고, 공소청에서 기소 판단을 별도로 설득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01

수사기관 확인

경찰·중수청·특사경·
공수처 중 주도 기관과
경합 가능성 확인

02

초기 기록 형성

압수수색·조사
초기부터 핵심 사실 및
법리 구조 제시

03

공소청 대비

송치 전부터 기소
판단용 종합 의견서·
증거 체계 준비

04

절차적 권리 활용

영상기록·진술녹음·
기록열람·면담신청 등
새 절차 활용

세종 형사그룹이 권고하는 4가지 준비

A



수사기관별 대응 매뉴얼 재정비

경찰·중수청·공수처·특사경별 사건 접수,
영장, 조사, 송치 구조를 구분하여 내부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B



공소청 단계의 별도 변론 프로토콜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송치기록의 법리·증거 평가를 전제로 한
별도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C



이첩·경합상황의 진술·자료 통합관리

수사기관이 바뀌어도 기존 제출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중앙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D



하위규정 및 초기 운영사례 모니터링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검사·특사경
협력, 보완수사 관리 방식은 초기 실무에
따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큼.

※시행 전까지 관련 시행령·수사준칙 및 기관별 세부 운영규정이 추가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최신 규정을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형사그룹

법무법인(유) 세종의 형사그룹은 기업에 대한 금융·공정거래·노동·조세·영업비밀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신 법령과 판례가 가미된 깊이 있는 법률 자문도 제공하는 등 풍부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뉴스레터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작성자



장영수

대표변호사

T. 02-316-2803

E. ysojang@shinkim.com



이정환

파트너변호사

T. 02-316-4015

E. jhwlee@shinkim.com



김태형

파트너변호사

T. 02-316-7236

E. thyungkim@shinkim.com



석동현

파트너변호사

T. 02-316-1812

E. dhseok@shinkim.com



정한균

변호사

T. 02-316-2896

E. hkj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el 02-316-4114 **Fax** 02-756-6226 **Email** shinkim@shinkim.com

www.shinkim.com